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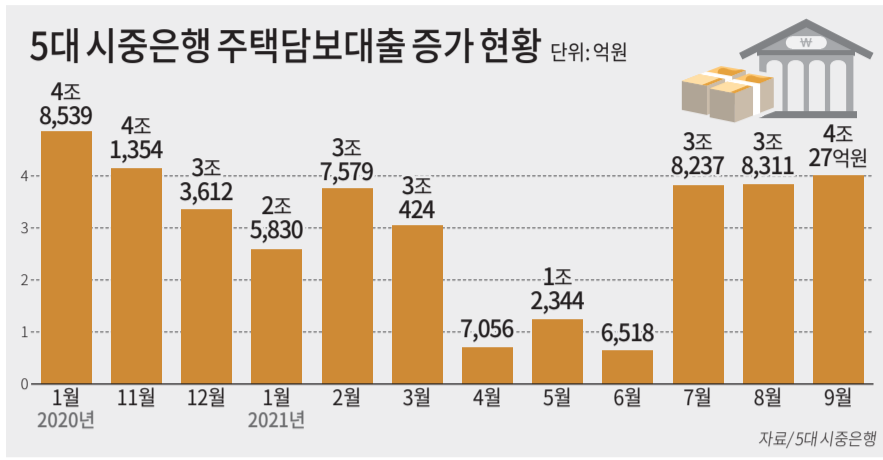
일방적 규제에 애타는 수요자... “분양자 숨통 조이는 정책”

주담대 규제시 수요자 피해 불가피
“부동산 가격부터 먼저 낮춰야
갈수록 대출절벽이 심화될 것”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가장 많이 오른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부동산 전세가격이 올라 가계대출이 오른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은행 “가계대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9월말 가계대출잔액은 702조8878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72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하면



4.88%(32조7339억원)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5대 은행의 9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7조4174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26억원 늘었다. 그 중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1조4308억원으로 전월비 1조4638억원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 증가세는 전달과 비슷

했다. 5대 은행의 9월 말 신용대출 잔액은 141조원으로 전월대비 1058억원 증가했다. 지난7월 1조8637억원 급증한 이후 은행들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개인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두 달 연속 둔화했다는 설명이다.

◆서민 “부동산 전세가격부터 줄여야”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수요자의 피

해가 이어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 보다 부동산 가격부터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 아파트 매매 시세는 지난9월 17일과 비교해 0.12%p(4046만원/3.3㎡) 오르고, 전세시세는 0.09%p(2085만원/3.3㎡) 증가했다. 서울시 기준 부동산 매매 전세 시세는 지난 8월 13일 잠시 주춤한 이후 지속적으로 올랐다. 지난 8월 이후 매매가는 평균 0.16%p, 전세가는 0.13%p씩 증가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무주택 실거주 분양자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요청합니다’의 청원글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 투기 잡겠다고 대출을 막는 건 결국 대는 집 없는 무주택들만 피해가 가게 돼 있다”며 “투기를 골라내서 막는 건

정부가 할 일인만큼 당장 분양자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시자는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날벼락 같은 기사를 접하고는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청약 신규 분양아파트들이 고금리 대부업자를 알아보는 입장인 만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실수요자 규제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업체들은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출을 줄이려 할 것이고, 증가율이 낮은 업체는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문턱을 계속 높일 것”이라며 “연말도 갈수록 대출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특금법 고비 넘긴 가상자산거래소 고객확인제·트래블룰 등 과제 산적

업비트 내일부터 고객 확인 제도 시행
신원 미인증시 13일부터 모든 거래금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마치며 한 고비를 넘겼다. 다만 ‘고객확인제도(KYC)’,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오는 6일 0시부터 고객확인 제도 전면 시행에 나선다. 신원인증을 하지 않아도 오는 12일까지는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는 가능하지만, 오는 13일부터는 모든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업비트는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말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기존 회원에 한해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시스

고객확인제도는 업비트를 시작으로 다른 곳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으로 신고한 거래소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들에게 연내 제도 적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들 모두 신고 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면서 수리증을 받는 대로 고객확인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확인제도 외에도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

자가 파악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특금법상 포함된 내용이지만 금융당국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25일부터 적용을 완료한다.

현재 국내 4대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장 먼저 신고를 마친 업비트는 자회사인 람다256이 개발한 트래블룰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지난 1일에는 포스텍과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하는 등 트래블룰 적용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 적용에 대해서는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없는 만큼 일부 트래블룰에 대해 거래소들이 수익화 모델로 생각해 각자의 방식을 제안하면서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는 모양새”라는 설명이다. 또 그는 “거래소에게는 트래블룰, 고객확인제도 도입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과세 도입까지 예정된 만큼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루이비통 기습 가격 인상에 구매자 인산인해 지난 1일 루이비통이 주요 핸드백 가격을 기습 인상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시민들이 백화점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시스

홍수·가뭄 대응, 녹조·적조 감시 ‘수자원위성’ 2025년 발사 목표

내년부터 4년간 예산 1427억 투입
“첨단 관측체계로 안전환경 조성”

홍수·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수자원위성이 오는 2025년 발사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부터 4년간 예산 1427억원을 투입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수자원위성 개발을 시작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진들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수자원위성 지상모델 현장실험과 시연회를 열었다.

연구진들은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장착한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해 보령댐 유역을 고해상도로 관측했다. 이어 관측된 정보를 통해 댐·하천 유역 물 탐

지, 구조물 안전성 감시 등에 수자원위성 활용 가능 여부를 평가했다.

환경부는 고품질 영상 관측이 가능하도록 지상모델을 안정화한 뒤, 내년부터 수자원위성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홍수, 가뭄, 녹조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데 수자원위성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 시대를 맞아 수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위성 산업 육성과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수자원위성은 수재해 대응 기술을 한 단계 격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인 수자원위성 개발로 하천 전역의 물 썩 틈 없는 첨단 관측체계를 구축해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치료제 비용 1인당 90만원... 정부 전액 부담

>> 1면 ‘질병청, 먹는 코로나...’서 계속

임상에 참여한 존스 홉킨스 보건 안보 센터의 아메시 아달자 선임 연구원은 “이 정도까지 입원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제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것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디시비르’가 유일하다. 렘디시비르는 정

맥주사 형태로, 간단한 경구용 치료제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로버트데이비스머크최고경영자(CEO)는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를 관리하는 방법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머크는 올해 말까지 1000만개의 치료제를 생산할 계획이다. 머크는 미국 정부와 몰누피라비르를 700달러(약 83만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연내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한국 정부도 선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우선 먹는 치료제 3만 8000명분 구매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168억원을 확보하고 2022년 예산 194억원을 책정했다.

치료제 비용은 1인당 9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정부는 백신과 마찬가지로 치료제 투여 비용 역시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